

민주통합 공천, 당선 가능성보다 '정체성' 중시한다는데...

# 모호한 기준, 계량화 난제로

### 예비후보들 경제 민주화·보편적 복지 부각 초점

### FTA·4대강 찬성 의원들 "불이익 받을라" 촉각

민주통합당이 공천 기준에서 정체성의 배정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제시함에 따라 지역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예비후보들은 공심위 심사에 앞서 경제 민주화와 보편적 복지 정책에 대한 비전 마련을 통해 확고한 미래 지향적 정체성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한미 FTA 비준과 4대 강 사업 등 당론과 엇박자를 보였던 일부 현역 국회의원들은 공천 심사에서 불

이익을 받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9일 광주·전남지역 민주통합당 예비후보자들은 이날부터 시작된 후보자 추천(공천) 신청서 접수에 나서면서 당이 요구하는 정체성에 부합하는 콘텐츠 구축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경제 민주화와 보편적 복지 등 민주통합당의 당론과 강령에 부합하는 정책적 비전 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예비 후보들은 중

앙당이 요구하는 19대 의정활동 계획서와 자기소개서는 물론 강철규 공심위원장이 제시한 3가지 질의와 관련, 진보적 가치를 중점으로 두고 답변에 나서고 있다.

일단 광주·전남지역 현역 국회의원들은 18대 국회 의정 활동 과정에서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 정책 마련 등에 노력했던 점을 부각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부 예비 후보들은 자신들이 살아온 삶의 과정에서의 사회적 봉사활동 헌신 등을 강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정체성을 수치적으로 계량화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예비 후보들은 공심위 심사 결과가 다소 애매하

게 나올 수 있지 않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체성의 모호한 기준을 매개로 공천 결정에 있어 당내의 미묘한 역학구도가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다.

광주 모 후보 캠프 관계자는 "정체성을 강조하는 것은 좋지만 수치적 계량화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라며 "구체적인 배점을 공개하지 않고 공천이 이뤄진다면 정체성 점수를 놓고 상당한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미 FTA 비준, 4대 강 사업 등을 둘러싸고 당론 배치 논란을 빚었던 일부 현역 국회의원들은



9일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공천심사위원회 회의에서 강철규 위원장을 비롯한 공심위원들이 환담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공혹스러운 입장이다.

우선 한미 FTA 비준 문제와 관련, 협상과로 분류했던 김성곤(여수 갑), 김동철 의원(광산 갑)은 "당시에는 물리적 충돌로는 한나라당의 단독처리가 불가피해 협상을 통해 ISD 등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입장이었지 한미 FTA 비준안을 찬성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최인기 의원 측 핵심 관계자는 "강의 생태와 환경을 파괴하는 이명박 정권의 4대 강 사업은 원칙적으로 반대했다"며 "다만 영산강의 경우, 수질을 개선하고 뱃길을 복원하는 부분에만 동의했다"고 밝혔다.

중앙당 관계자는 "공심위 심사에 서 정체성 배점이 과거 당 기여도가 차지했던 배점을 넘어설 전망이다"이라며 "컷-오프 과정에서 정체성 배점은 예비 후보들의 생사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새누리 광주·전남 예비후보들 속탄다

### 석패율제 도입 난항... 19대 국회 입성 물거품 위기

4·11 총선을 앞두고 광주·전남지역에서 새누리당 간판을 달고 국회 입성을 노리는 후보자들의 한숨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 석패율제가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기에는 난관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 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석패율제 도입 논의가 무산됐다. 이번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놓고 양당이 지역구를 지키려고 버티느라 회

의조차 열지 못한 것이다.

또 자유선진당·통합진보당이 석패율제 도입에 대해 강력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데,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일부 인사들도 부정적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국회에서 석패율제가 도입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같이 석패율제 도입이 난항을 겪으면서 '19대 광주·전남 새누리당

의원' 탄생이라는 후보자들의 희망도 점차 멀어져 가고 있다. 현재 광주·전남 새누리당 출신 후보는 광주 2명, 전남 4명 등 모두 6명이다.

새누리당 후보들은 자당이 광주·전남 각 선거구에서 절대 약세인 점을 감안, 석패율제 도입을 내심 바라왔다. 특히 일부 후보자들은 10% 이상의 득표율을 목표로 선거운동에 임하는 등 나름 노력을 기울여왔다.

모 후보 측 관계자는 "이번 국회에

서 석패율제 도입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갈수록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다"며 "선거운동도 재점검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석패율제는 총선에서 열세 지역에 출마해 낙선한 정당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제도다. 다만, 각 시·도별 국회의원 당선자 수가 그 지역 전체 지역구 수의 3분의1에 미달하는 정당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또 그 지역에서 10% 이상의 득표율을 올린 후보만 석패율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 민주통합, 총선후보자 접수 첫날 부쩍

### 신청자 256명이나 몰려

### 네트워크 장에 지연도

민주통합당의 4·11 총선 후보자 온라인 접수 시작 첫 날인 9일부터 신청자가 크게 몰려, 총선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에 따르면 총선 접수 첫 날인 이날 오후 5시 현재 기준으로 무려 256명이 전용 프로그램에 접속해 공천 서류 작성 작업을 시작했다.

이를 반영하듯, 이날 오전 10시께에는 후보자들이 한꺼번에 프

그램에 접속하는 바람에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 20여분간 접수가 중단되기도 했다.

민주통합당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야권의 선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접수마감일인 11일까지 신청자가 7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지난 18대 총선 후보자 접수 상황과 비교하면 정반대 분위기다. 당시에는 접수 첫날 신청자가 2명에 그치는 등 '개접휴업' 분위기가 짙었다.

18대에는 총선 전망이 민주당에 크게 불리했었고 접수 방식이 온라

인 이 아니라 한 번에 20여 가지의 서류를 당시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신청 마지막 날 후보자들이 몰려들었다. 당시 민주당에 공천을 신청한 후보자는 500명에도 미치지 못해 전국 평균 2대 1 정도의 경쟁률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한편, 이날 공천 신청자 가운데는 민주통합당이 파악하지 못한 여성 후보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역구의 15% 이상을 여성후보로 공천하는 원칙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호남 몫 비례대표 후보 호남에서 뽑겠다"

### 박근혜위원장 "도덕성 걸리면 공천 제외"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호남 몫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지역에서 뽑겠다"며 "지역에서 현신하고 일 한 사람을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낮 지역 언론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공천위가 추구하는 최고의 공천 테마는 철저히 국민의 뜻과 눈높이에 따르는 공천을 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천에서 가장 중시되는 가치로 도덕성과 경쟁력을 꼽았다. 도덕성에 대해서는 강화된 기준을 언급하며 "도덕성에 걸리면 무조건 공천대상에서 제외되고, 출마와 경선 자체를 참여조차 못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 "정개특위 문제는 제가 관여할 수는 없으나 원칙에 맞게 한다"면서 "세종시는 확실히 분구될 것으로 알

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통합당의 '정권교체 후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폐기' 주장에 대해 "한미FTA 시작은 노무현 정부다. 당시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총리, 장관 등 여러 지도부가 이것은 안 하면 안 된다고 굉장히 강조했다"며 "국민을 설득시키기 위해 그렇게 하고 다시 정권을 잡으면 폐기하겠다는 얘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새누리 경선, 여론조사로 바꾸나

### 선거법 개정논의 난항

### 국민경선제 대안검토

개방형 국민경선으로 4·11 총선 후보를 뽑기로 했던 새누리당이 관련 선거법 개정 논의가 난항을 거듭하자 대안으로 '여론조사 경선'을 검토하

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선거구별 경선이 이상적이지만 선거 60여일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여론조사로 국민의 뜻에 맞는 후보를 선출하자는 취지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관계자는 9일 "개방형 국민경선제는 여야가 함께 해야 이상적인데 그게 안 될 경우 단독으로 실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른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앞서 '책임당원 20%, 일반국민 80%'의 비율로 선거구별 선거인단이 구성되는 국민경선제를 전체 지역구의 80%에서 실시키로 한 바 있다.

당내에서는 여론조사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월 초까지 후보를 확정하려면 여론조사가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당내에서는 여론조사가 실시될 경우 '국민의 뜻'의 반영률을 높고 여러 의견이 오가고 있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기존의 '2:3:3:3' (2대의원 20%, 일반당원 30%, 일반국민 30%, 여론조사 20%) 경선제를 보완, "여론조사 비율을 당원 대 국민 50% 대 50%로 조정해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교육과학기술부 인증**

광주일보와 함께하는

## 방과후교사(양성과정) 모집

| 과 정   | 모집인원  | 과 정      | 모집인원  |
|---|-------|----------|-------|
| 신문활용 논술교실   | 각 30명 | 창의적 미술교실 | 각 20명 |
| 사진활용 학습교실   |       | 창의적 수학교실 |       |
| 자기주도 학습교실   |       | 신나는 음악교실 |       |
| 원어민참여 영어교실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정책)                                       |       | 즐거운 체육교실 |       |
|   |       | 즐거운 한자교실 |       |
| 포트폴리오 준비를 위한 3과목 동시 자격증(토요일을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 지도사+자기주도적 학습 지도사+진로탐색상담사) |       |          | 20명   |

- 모집대상 : 전년대 졸업자 /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해당분야 전공자
- 접수기간 : 2012년 2월 6일(월)~2월 24일(금)
- 교육기간 : 2012년 2월 27일(월)~3월 3일(토)까지
- 교육시간 : 매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 수 강 료 : 29만원 (자격증 비용 별도)
- 접수방법 : 알리오TV(www.aliotv.kr) 홈페이지 참조
- 활동지역 : 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 특 전 : 1. 광주일보 수료증 발급  
2. 성적우수자 초·중·고 방과후 교사 취업 우선지원  
3. 수료시험 이후 방과후 교사 자격증 수여

※ 자격취득 후 진로 : 창업지원, 방과후교사, 문화센터, 복지관, 주민자치센터 지역아동센터 강사 등으로 취업하실 수 있습니다.

※ 광주일보와 함께하는 방과후교육 시·군지회 모집

주 최 : 66 광주일보사  
광주일보사 교육법인  
주 관 : ADEC (주)아 데 크  
교육과학기술부소관 비영리 사단법인  
한국방과후교육연합회 광주지회

문의전화. 062-220-0555 H.P 018-693-6604